

사드(THAAD) 배치와 한미 및 한중관계 전망

김태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장)

사드(THAAD)의 배치 문제와 관련한 일차적인 과제는 ‘모호성 전략’을 마감하고 조속히 배치를 결정하는 일이다. 한국이 구축해온 한국형미사일방어(KAMD)가 단 1회의 요격 기회를 가지는 종말 단계 하층방어용임을 감안한다면, 사드를 통해 중첩방어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군사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과제는 사드에만 함몰되어 종합적·포괄적 북핵 대응책 수립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군은 기술적·정치적 타당성에 한계가 있는 선제(킬체인)와 방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상호취약성의 확보에 용이한 응징을 중심에 두고 선제와 방어가 이를 보완하는 ‘최적의 배합(optimal mix)’을 찾아야 한다. 포괄적·종합적 대비책에는 한미연합태세의 강화도 포함되어야 하며, 핵심은 동맹조약에 자동개입 조항과 핵우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사드는 한미관계에 순기능을 할 것이다. 한국에게는 동맹관리의 수단으로서 상호신뢰성을 회복하고 한국변수의 주변부화(marginalization)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한중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사드는 중국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며, 반대의 주된 이유는 미중 간 지전략적 경쟁에서 비롯된다. 또한, 한중관계는 경제적 공생관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단일사안에 의해 심각한 충격을 받을 만큼 취약하지 않다. 중국의 반발이나 과장된 주장이 한국의 사드 결정에 주요 변수가 될 필요는 없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6.17) 발표자료

목 차

1. 들어가며
2. 북한의 핵무장 사업과 핵동인(核動因)
3. 북핵 위협 통제·억제의 필요성
4. 한국의 군사적 대응과 개선점
5. 북핵 억제를 위한 최적의 배합
6. 사드 배치와 한미관계
7. 사드 배치와 한중관계
8. 마치며

1. 들어가며

-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김정일이 남긴 유산사업인 핵무장 사업을 이어가는 중에 한국을 겨냥하는 북핵의 위협은 날로 가중되고 있음
 - 그동안의 정황들을 종합할 때, 북한이 핵탄의 경량화·소형화·다종화에 상당한 능력을 축적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만간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 한국이 택하고 있는 것은 방어와 선제라고 할 수 있음
 - 방어를 위해 한국은 이명박 정부 이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구축해오고 있으며, 이와 함께 2013년부터는 사전 탐지를 통한 선제타격을 골자로 하는 ‘킬체인(kill-chain)’의 구축을 추진 중임
 - 이에 국방부는 2015년 4월 20일 발표한 「2016~2020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KAMD와 킬체인에 8조 7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힘¹⁾
- 3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반복되는 미사일 시험발사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경계심을 고조시킴
 - 국방부 내외에서 종말 단계 하층에서의 단 1회 요격 기회만을 가지는 KAMD의 불충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은 당연했으며, 그 연장선에서 중첩 요격을 위한 사드(THAAD)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미국의 공직자들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에 이름
 - 중국은 관민학(官民學) 채널을 총동원하여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는 찬반론이 활발하게 전개 중이며, 안보우선론과 동맹중시론에 근거하는 찬성론과 한중관계 보호의 필요성에 근거하는 반대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일부 친북·종북 세력들이 한중관계 중시론이나 방어미사일의 기술적 불안정성을 내세우면서 반대론에 편승하는 경향도 보임
 - 2015년 4월 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실험 공개가 안보중시론에 새로운 모멘텀을 더해주었지만,²⁾ 사드 배치를 둘러싼 찬반론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국방부도 “요청받은 바가 없고, 혐의한 바도 없으며, 결정된 것도 없다.”라는 ‘3무(無)’ 원칙을 고수 중임
- 사드는 결코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라는 대과제에서 핵심적 주제가 될 수는 없음
 - 사드의 배치는 당연하고 시급한 일이지만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한 부분만을 담당할 뿐이며, 한국의 군사적 대응은 보다 포괄적·종합적인 것이어야 함

-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이나 한중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과도한 예상이 사드의 배치에 중요한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보다는 한미동맹에 미칠 긍정적 영향이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되어야 할 것임
- 안보에 관한 한 ‘정치’나 ‘외교’보다는 ‘원칙’이 우선이며, 북한 정권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다면 더욱 그러함. 그렇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 관한 한, 국방부가 ‘3무’ 원칙을 종식하고 배치를 위한 공식적인 한미협의를 착수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한국이 직면한 핵심적 당면 과제는 사드 문제에만 함몰되지 않고 사드를 포함한 효과적·효율적인 종합 대책을 모색하는 일이어야 함

2. 북한의 핵무장 사업과 핵동인(核動因)

- 북한에게 있어 핵무장은 3대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 사업이며,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서는 김일성-김정일이 남긴 최대의 유훈사업
 - 북한의 핵개발 역사에 비추어보면 김일성 주석은 ‘핵무장 사업의 창시자’로서 6.25 전쟁의 정전 직후부터 핵 보유를 구상하여 50~60년대부터 인재양성에 착수하고 70년대에 영변핵연구단지 건설을 시작함. 80년대부터 부분 가동하여 플루토늄(Pu) 생산을 실현한 최초의 설계자
 - 북한이 이미 70년대부터 주요 투발수단인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한 것도 김일성의 주도하에서 가능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이 구축한 핵개발 인프라를 본격 가동하여 핵실험까지 실행한 ‘핵무장 사업의 집행자’
 - 김정일 정권은 1994년 미국과 체결한 제네바핵합의(Agreed Framework)를 기만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제조 경로를 모색했고, 이 합의를 파기한 후에는 노골적으로 플루토늄탄을 제조하여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이 보유한 양질의 우라늄 광산을 의식하여 우라늄탄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함
 - 북한이 농축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파키스탄과의 압둘 카디르 칸(Khan) 박사와 은밀한 거래를 시작한 것은 제네바핵합의에 서명한 직후이며, 북핵 문제의 진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염원을 담은 6자회담(2002~2008)이 13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지만, 김정일 정권은 ‘대화 따로, 핵개발 따로’라는 이중전략(two-track strategy)을 통해 이를 우회·기만함
 -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등 6자회담이 이룬 성과가 국내외 낙관론자들을 일시적으로 열광하게 만들었지만, 결과만을 놓고 볼 때

3차례에 걸쳐

북한의 핵실험과

반복되는 미사일

시험발사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경계심을 고조시킴.

북한에게 있어

핵무장은 3대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 사업이며,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서는

김일성-김정일이 남긴

최대의 유훈사업

2011년 김정일**위원장의 급사와 함께****권력을 세습 받은****김정은 노동당****제1비서는 핵무장****사업을 계승****발전시키는 것과 함께****'핵군사력의 본격적인****운영자'로서 책무를****다하고 있음**

- 김정일 정권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에 불과
-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이듬해인 2006년 첫 핵실험을 실시했고, 2007년 2.13 합의나 2008년 5MW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 그리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억제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함
-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의 급사(急死)와 함께 권력을 세습 받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핵무장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핵군사력의 본격적인 운영자'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음
 - 김정은 정권은 2012년 개정된 헌법에서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천명했고, 2013년 2월에는 세계여론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이어서 3월에는 '병진(並進)정책' 선포를 통해 핵무장 사업의 계승을 재확인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진행 중임
 -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북한의 핵무장 사업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경량화·소형화·다종화 성공' 선언, 빈번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로켓 엔진 시험, 대남 핵공격 위협 등 그동안 드러난 정황들을 종합할 때 핵무기의 실전배치는 임박한 것으로 보임
 - 북한에게 있어 '체제 딜레마'는 가장 강력한 핵동인(核動因)을 제공하는 원천
 -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수용하면 일순간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점은 북한의 지도부도 알고 있지만, 그로 인한 외부사조의 유입과 주민의 깨우침이 백두혈통 세습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쉽사리 개혁개방을 결단하지 못함
 - 체제가 붕괴되면 기득권을 누려온 지배층의 비참한 말로(末路)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키더라도 체제생존을 우선시하지 않을 수 없음
 - 북한에게 핵무기는 체제생존을 위한 궁극적 수단이 되고 있는데, 통치기반 불안정과 국제적 고립이라는 내외외환(內憂外患)에 시달려야 하는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음
 - 김정은 정권은 핵무장을 통해 대내용 후광 효과(halo effect), 대남용 핵 그림자 효과(nuclear shadow effect) 그리고 대미용 동등화 효과(equalizing effect) 라는 세 가지 효과를 노림
 - 대내적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최고 지도자의 과학적 업적이자 북한을 군사강국으로 만들어 주는 최상의 수단으로 선전함으로써 핵이 발생하는 후광효과로 통치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봄

- 한국을 향해서는 한반도에 짙은 핵그림자를 드리우고 이를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며, 핵 위협을 통해 한국 정부와 국민을 위축시킴으로써 상대적 경제강국인 한국을 압도하고 남북관계를 주도하기를 원함
- 미국에 대해서는 약소국인 자신들이 핵무기를 통해 강대국인 미국과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이룸으로써 미국의 체제위협을 불식시키고 대등한 협상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것
-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북한이 굳이 미 본토를 사정권에 넣은 대륙간탄도탄(ICBM)을 개발하고 대미(對美) 핵공격 위협을 반복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이렇듯 강력한 핵동인을 가진 김정은 정권이 ‘핵억제력’을 증강하고 대남·대미 핵전쟁 위협을 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정작 놀라운 것은 북핵 위협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이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끼칠 악영향과 폐해(弊害)들을 간과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무신경이라 할 수 있음

3. 북핵 위협 통제·억제의 필요성

-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이 강건하고 핵문제로 인하여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군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음
 - 핵무기는 강력한 ‘핵그림자 효과’를 발휘하는 대남 비대칭 수단(asymmetric capabilities)의 핵심으로서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남북관계를 주도하려고 있고, 이런 위협을 적절하게 상쇄·억제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다양한 폐해를 겪어야 함
- 첫째, 북한의 남북관계 주도력이 강화될 것
 - 한국 정부와 국민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맞서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 북한의 위협에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약자의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 이 현상은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
 - 북핵 위협을 통제·억제하지 못한다면 남북관계는 ‘갑을(甲乙)관계’로 변질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생존을 위해 북한에게 평화를 구걸해야 하는 우냥(牛狼)관계로 전락할 수 있음
- 둘째, 도발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어려울 것
 - 북한의 대남도발은 분단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핵그림자 효과를 배경으로 하는 대담한 무력도발이 이어짐
 - 2010년 3월 북한의 130톤급 연어급 잠수정에 의한 천안함 폭침은 자국 영해에서 정상적으로 작전에 임하고 있던 한국의 해군함정을 공격한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이
강건하고 핵문제로
인하여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군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음*

**북한이 핵무기라는
비대칭 능력으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무력도발을 포기하고
이에 비례하여
상생을 택할 가능성은
낮아지며, 반대로
도발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반대급부를 득하겠다는
동기는 강해짐**

것으로서, 이는 도발을 넘는 사실상의 전쟁행위이자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역시 6.25 전쟁 정전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이 한국의 영토를 포격한 전쟁행위임

- 북한이 이토록 중대한 도발을 자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핵그립자 효과에 대한 신뢰가 바탕
 - “한국 정부와 국민은 핵보유 북한에 맞대응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우고 일방적으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도발의 악순환은 차단되지 않을 것
- 셋째, 북핵 위협은 한국의 대북정책과 통일염원을 무력화시키는 위협요인
- 대북정책이란 한국이 북한에 대해 펼치는 모든 정책을 총칭하는 것이지만 궁극적 목표는 ‘상생(相生)’과 ‘북한의 변화’라는 두 가지로 압축 가능
 - 이는 분단기간 동안에는 남북이 무력충돌을 불식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며, 한국의 딜레마는 이 두 목표가 불가피하게 상호상충성을 가진다는 점임
 -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상생을 위해 자신들의 주권적 실체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자신들의 체제와 가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요구하고 외부사조를 유입시키는 것은 반길 수 없음
 - 한국은 통일이 되는 순간까지 상호모순적인 두 목표를 병행 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이 분단국의宿命
- 북핵은 한국의 이러한 목표들을 성취하는 데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
- 북한이 핵무기라는 비대칭 능력으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무력도발을 포기하고 이에 비례하여 상생을 택할 가능성은 낮아지며, 반대로 도발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반대급부를 득하겠다는 동기는 강해짐
 - 북한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변화와 개혁개방의 길을 택할 가능성도 더욱 희박해지며, 오히려 한국의 정책변화를 강제하고자 하는 북한의 동기는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한국의 헌법 제4조가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받아들이기 가능성도 낮아짐
 - 북한의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의 기회가 도래하는 경우 핵무기는 북한군으로 하여금 평화로운 투항보다는 무력저항을 택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통일과정을 무산 또는 역류시킬 수 있으며, 통일과정은 유혈극으로 변질 가능

- 돌이켜 보건대, 현대식 국가(nation-state) 생성 이래 무력이 강한 나라가 스스로 체제를 포기하고 약한 나라에 평화롭게 흡수된 사례는 없으며, 이런 일은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임
 - 독일 통일의 경우도 결코 예외가 아님. 동독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의 붕괴 이후 이듬해 10월 통일까지 50만 명의 동독인들이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았을 것이며, 순순히 ‘평화로운 흡수통일’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임
 - 그 경우 독일 통일은 무산되거나 지연되었을 수 있으며, 통일과정에서 많은 유혈사태가 수반되었을 수도 있었음
 - 북핵의 존재와 그로 인한 비대칭적 위협은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의 정책과 외교 노력을 한낱 무의미한 허례의식으로 전락시킬 수 있고, 한국으로서는 북핵 위협을 적절하게 통제·억제해야 할 절박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셈임

4. 한국의 군사적 대응과 개선점

-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차원에서의 한국의 대응은 ‘3D’, 즉 대화(dialogue), 외교(diplomacy) 그리고 군사적 억제(deterrence)로 요약 가능함
 - 이 중 군사적 억제는 선제(preemption), 방어(defense), 방호(protection), 응징(retaliation) 등 네 가지 방법으로 압축될 수 있음
 - 이 중에서 방호 부분은 당장 한국과는 무관함. 스위스의 경우 41,277평방 km의 국토에 8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영세중립국이지만 냉전 동안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전 국민을 수용할 수 있는 약 30만 개의 핵대피소를 건설하고 1,200여 개의 민방위조직을 운용함
 - 여기에 비한다면, 한국의 방호 투자는 거의 전무한데다 북핵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국론분열과 복지 문제의 과도한 정치화로 인해 핵방호 시설을 위한 예산염출은 불가능함
 - 방호는 추후 장기과제로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국방부가 당장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선제, 방어 그리고 응징이라는 세 가지 선택으로 압축되는데, 이 중에서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것은 방어와 선제임
 - 방어를 위해 국방부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그리고 선제를 위해서는 ‘킬체인(kill-chain)’ 구축을 계획 중인데, 킬체인은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직후 정승조 당시 합참의장이 밝힌 것으로 북한의 핵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여 선제공격을 통해 파괴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2013년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킬체인 개념이 포함된 ‘맞춤형 억제’에 합의함으로써 한미 간에서도 공식화되었음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차원에서의
한국의 대응은
‘3D’, 즉 대화, 외교,
그리고 군사적
억제로 요약 가능함**

**C4체계와 관련해서도
한국군은 전작권
분리에 대비하여
합동지휘통제체계
(KJCCS)를 구축한
상태이나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라 할 수
있음**

-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에는 간과할 수 없는 결점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바로 기술적·정치적 타당성의 한계성 문제임
 - 킬체인의 기본개념은 핵발사 징후가 탐지되면 이를 ‘시한성 긴급표적(time sensitive target)’으로 설정하여 30분 이내에 탐지-식별-결심-타격의 단계를 거쳐 위협원을 제거하는 것
 - 한국군이 킬체인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센서체계(ISR), 신속한 타격명령 전달을 위한 지휘·통제·통신·컴퓨터(C4) 체계 그리고 선제타격을 위한 정밀타격 무기체계(PGM)와 타격전략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지만, 아직은 미흡한 상태임
 - 다목적 인공위성, 금강 및 백두 정찰기 등 현재 한국이 보유한 자산으로는 북한군의 이동발사대(TEL)를 탐지·추적하기는 무리이며,⁴⁾ 북한이 SLBM을 배치하는 경우 사전탐지는 더욱 어려워짐
- C4체계와 관련해서도 한국군은 전작권 분리에 대비하여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구축한 상태이나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라 할 수 있음
 - PGM 분야와 관련해서 한국군은 ATACMS(사거리 300km), 현무-2(300~500km), 현무-3 순항미사일(1500km) 등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공군은 SLAM-ER, AGM-142, JDAM, GBU-24, Bunker-Buster 등 정밀유도 무기들을 보유함
 -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비대칭 수단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한국군이 보유한 타격수단들은 질양(質量)면에서 왜소함
 - 킬체인을 구축한다는 발상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기술적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재원이 투입되어야 함을 유의해야함
- 킬체인을 위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도 정치적 타당성의 한계라는 문제가 존재함
 - 킬체인을 통한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경우, 한국은 선제하지 않았다면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증명해야 함
 -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예방적 선제공격(preventive strike)이 아닌 국제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는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핵발사를 사전에 탐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일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한국은 전쟁도발국으로 매도될 수 있으며, 북한에게 확전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음
 -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군통수권자 또는 통수권자로부터 군령권을 위임 받은 지휘관이 대북 선제공격을 명령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킬체인은 최첨단·고정밀 자산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술적 타당성을 가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자원투여가 필요한데다 상대국 영토 내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임

-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도 기술적 타당성에 있어서의 한계성을 가진
 - 미사일방어란 상대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표적에 도착하기 전에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여 파괴하는 것으로, 미사일의 비행궤적은 대개 부스트 단계(boost stage), 부스트 단계 이후 최고 정점에 이르기까지의 상승 단계(ascent stage), 정점 이후 주로 외기권에서 비행하는 구간을 의미하는 중간경로 단계(midcourse stage), 목표물의 상공에서부터 목표물을 향해 급강하하는 종말 단계(terminal stage) 등으로 구분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스트 단계(boost phase), 비행 단계(flight phase), 종말 단계(terminal phase) 등 3단계로 구분되기도 함
 - 부시 대통령(George W. Bush) 이후 미국이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BMD)는 중첩요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중간경로 단계에서의 요격을 위해서는 유효고도 2,000km인 GBI 체계를, 종말 단계 상층방어를 위해서는 30여 척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유효고도 150km의 SM-3 요격미사일과 THAAD 미사일을 그리고 종말 단계 하층방어를 위해서는 유효고도 15~20km의 PAC-3를 배치
 - 미국은 NATO 및 아시아 동맹국들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데, PAC-3를 한국 등 해외 미군기지 보호용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일본, 대만 등과도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함
 -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SM-3 Block II를 개발한데 이어 미국의 X-band 레이더인 AN/TPY-2를 일본 내에 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상에서의 중첩요격을 위해 THAAD이나 지상배치용 SM-3을 구입하는 문제를 검토 중임⁵⁾
- 여기에 비해 한국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KAMD는 종말 단계 하층방어에 국한
 - 한국이 일차적으로 구축한 미사일방어체계는 PAC-2에 의한 종말 단계 하층방어가 전부였으며, 이후 PAC-3를 구입하고 이스라엘로부터 그린 파인 레이더 2식을 구입했지만 여전히 종말 단계 하층방어에 머물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군이 2011년에 개발하여 최근 공개한 파편탄두 방식의 철매-2(KM-SAM)가 실전 배치되어도 달라지지 않음
 - 이 미사일 역시 유효고도가 15km에 불과하여 어차피 중첩방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군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들 사이에 마지막 단계에서 단 한 번만의 교전 기회를 가지는 현 요격체제의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당연했고, 이와 함께 종말 단계 상층방어가 가능한 THAAD 미사일이나 SM-3

한국이 일차적으로 구축한 미사일방어체계는 PAC-2에 의한 종말 단계 하층방어가 전부였으며, 이후 PAC-3를 구입하고 이스라엘로부터 그린파인 레이더 2식을 구입했지만 여전히 종말 단계 하층방어에 머물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군이 2011년에 개발하여 최근 공개한 파편탄두방식의 철매-2(KM-SAM)가 실전 배치되어도 달라지지 않음

**지리적 인접성,
시한의 촉박성,
상대적으로 복잡한
한반도의 지형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KAMD로 북한
미사일들을 모두
요격할 수는 없으며,
협소한 공간에서의
핵폭발이 가져올
막대한 피해를
감안한다면
'높은 요격 성공률'이
성공적인 방어를
의미할 수도 없음**

미사일을 도입하여 중첩방어를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됨⁶⁾
- 이후 미국 정부의 공직자들에 의한 '사드 한국 배치 가능성' 언급과 이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한국 내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 당사자인 한국의 국방부는 분명한 언급을 삼간 채 '3무(無)' 입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근년 동안 이루어진 한미 안보대화들을 종합할 때 사드 문제는 조만간 한미 간의 공식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미사일방어에 있어서의 최대 문제점은 방어의 불완전성
 - 미국은 제1, 2차 걸프전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용하여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을 막아냈지만 완벽한 방어가 되지는 않음
 - 지리적 인접성, 시한의 촉박성, 상대적으로 복잡한 한반도의 지형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KAMD로 북한 미사일들을 모두 요격할 수는 없으며, 협소한 공간에서의 핵폭발이 가져올 막대한 피해를 감안한다면 '높은 요격 성공률'이 성공적인 방어를 의미할 수도 없음
 - 이론적으로도 공격능력의 개발과 방어능력의 개발은 상호간 악순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방어능력은 새로운 공격능력의 개발을 부추기게 되는데,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러시아가 미국이 유럽에서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방어를 돌파하기 위해 보레이급 핵잠수함을 건조하여 불라바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이 좋은 예⁷⁾
 - 방어의 불완전성은 한국이 사드나 SM-3를 배치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이 SLBM을 배치하는 경우 불완전성은 더욱 증폭되고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방어'에 이르기까지 어느 수준의 기술력과 어떤 규모의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가에 있어서 상한선(upper limit)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서 고가(高價)의 고첨단·고정밀 장비들을 확보하기 위해 무한정 재원을 투입하기도 어려움

5. 북핵 억제를 위한 최적의 배합

- 방어와 선제가 북핵 억제전략으로서의 결점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반해, 응징을 골자로 하는 억제전략은 이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억제효과를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응징은 기발생한 공격행위에 대한 대응이므로 정당성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공격자에게 물리적 피해를 강요하기 때문에 억제력도 강력하고 선제나 방어가 요구하는 만큼의 고첨단 장비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함

- 북한이 수백만 원 가치에 불과한 소형 무인기를 서울 상공에 침투시켜 한국의 안보불안을 조성하는 경우, 방어를 통해 재발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탐지추적을 위해 저고도 레이더가 필요하고 요격을 위해서는 경공격기나 전투헬기를 배치해야 할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함
 - 한국도 동일한 부류의 소형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투시키는 맞대응을 택한다면, 저비용-고효율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천안함 폭침사태의 재발을 억제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은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국 함정에게 피해를 입히는 맞대응식 응징일 것임
 - 방어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소나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수상함의 대잠능력을 강화하거나 대잠 초계기들을 운용해야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같은 이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우고 대도시 공격을 위협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북한의 대도시나 산업 중심지들을 위협하는 응징 수단들을 보유해야 하는데, 광역지역을 볼모로 삼기 위한 이런 미사일은 선제가 요구하는 만큼의 정밀성이나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음
- 억제전략으로서의 응징이 가지는 핵심적인 가치는 상호취약성(mutual vulnerability)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는 사실에 있음⁹⁾
-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0년대 중반 미국과 소련은 6만 개에 달하는 핵탄두를 보유한 채 핵군비 경쟁을 벌였지만, 핵전쟁이 발발하지는 않았음
 - 핵전쟁 발발을 억제한 주역은 상호확실파괴(MAD) 전략이고, 이 전략은 상대국의 핵공격을 방어하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핵보복을 가한다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취약하다는 상호취약성(Mutual Vulnerability)을 증명해 어느 일방도 핵전쟁을 엄두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
 - 미국과 소련은 상호억제를 위해 핵무기를 지상과 공중 그리고 바다에 배치하는 핵3축 체제(nuclear triad)를 운용했지만, 그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상호취약성을 보장해준 것은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전략잠수함(SSBN)
 - 잠수함은 생존성, 은밀성, 치밀성 등을 갖춘 플랫폼(platform)이기 때문이었으며, 핵전략가들은 SSBN을 ‘핵세계 안정에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한 무기(the most stabilizing weapon)’로 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음
-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냉전시절 미소와는 전혀 다름
- 한반도에는 핵국인 북한과 비핵국인 한국이 대치하는 취약성의 불균형 상태에 있으며, 북한이 은밀성과 생존성을 자랑하는 SLBM까지 실전

한국도 동일한 부류의 소형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투시키는 맞대응을 택한다면, 저비용-고효율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천안함 폭침사태의 재발을 억제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은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국 함정에게 피해를 입히는 맞대응식 응징일 것임

‘능동적 억제 전략’

이란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도발을 저지를 경우

반드시 응징한다는

의지와 능력 그리고

체제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사용이나 도발을

엄두내지 못하게

한다는 개념에 기초함

- 배치하게 된다면, 한국의 일방적 취약성은 더욱 심화될 것
- 이는 ‘전략적으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여건’에 해당되고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라면 이론적으로 완벽할 수 없는 방어에 의존하기에 앞서 상호취약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북한이 조만간 SLBM까지 보유하게 될 예정이라면 더욱 그러함
- 이런 상황에서 응징을 배제하고 타당성에 제약이 수반되는 선제와 방어에만 집중한다면, 이는 대북억제의 핵심인 상호취약성 문제를 제쳐두는 것이 되고 말 것임
- 응징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 억제 전략과 관련해서는 2010년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가 건의한 ‘능동적 억제 전략’과 ‘한국형 3축 체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⁹⁾
 - ‘능동적 억제 전략’이란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도발을 저지를 경우 반드시 응징한다는 의지와 능력 그리고 체제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사용이나 도발을 엄두내지 못하게 한다는 개념에 기초함
 -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세부원칙으로는 응징의 즉각성 또는 시기적 적절성, 비례성 원칙의 폐기, 포괄적·신축적 타깃팅 정책, 참수작전 등을 들 수 있음
 - 응징의 시기적 적절성이란 응징을 가함에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며, 비례성 원칙의 폐기란 비례적 응징이 불가능한 여건에서는 응징 수단, 대상, 방법 등에 있어서 비대칭적 응징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고 당연히 응징 무기의 도덕성은 변수가 되지 않아야 함
 -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우고 무차별적 대량 살상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응징 무기의 선택에 있어 도덕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포괄적·신축적 타깃팅 정책이란 교전수칙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의 모든 것’이 응징용 타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 참수작전이란 도발이나 공격의 책임자를 무력으로 직접 징벌하는 것으로서 북한과 같은 비정상적 정권에게는 상당한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¹⁰⁾
 - ‘한국형 3축 체제’란 능동적 억제 전략을 뒷받침하는 하드웨어적 수단으로서 충분한 숫자의 각종 재래 타격수단들을 확보하여 지상, 공중 그리고 해상 및 해저에 적절히 분단 배치하여 생존성, 치명성, 정확성, 즉각성 등을 담보함으로써 응징의 의지와 능력을 증명함을 의미함
 - 응징은 방어와 같은 소극적 억제책에 비해 확전의 위험성이 크며, 확전은 “한국은 전면전을 할 수 없다.”라는 북한의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징 전략의 채택을 위해서는 당연히 전면전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각종 개혁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함¹¹⁾

- ‘능동적 억제’라는 표현은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 한국군이 응징의 필연성을 대북억제의 중심에 두고 이를 체계를 갖추는 것이고, 이상에서 기술한 선제, 방어, 방호, 응징 등 각 억제전략이 가지는 특징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선제	방어	방호	응징
억제효과	적극적	소극적	매우 소극적	적극적
요구되는 기술수준 (기술적 타당성)	매우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재정부담 (재정적 타당성)	매우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높음)
정당성 입증 (정치적 타당성)	매우 어려움 (낮음)	용이함 (매우 높음)	용이함 (높음)	용이함 (높음)
종합평가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나 제반 타당성은 낮음	정치적 타당성은 높으나 기술적·재정적 타당성이 낮고 억제효과도 제한적	기술적·정치적 타당성은 높으나, 재정적 타당성 희박하고 억제효과 제한적	제반 타당성이 우수하고 억제효과도 강력하나, 확산 위험성을 수반함

- 한국군이 수시로 ‘도발시 응징’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새로운 명칭의 응징전략을 천명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음
- 한국군이 육해공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미 3축 체제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크게 틀리지 않으나 “억제는 인식(how to perceive)에 달려있다”라는 고전적 진리를 중시한다면, 한국군으로서는 북한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고 우선 과거 한국군이 표방했던 ‘거부적 억제’ 전략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함
- 거부적 억제의 기본개념은 “북한이 도발하면 감내하기 어려운 손실을 강요함으로써 도발 자체를 억제한다”는 것이었지만, 한국군이 이를 실행하지 않음
- 1968년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에 대해 한국은 예비군 창설이라는 방어적 방식을 택했고, 1980년대 아웅산 폭탄테러와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음
- 사실상의 전쟁행위인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서도 군사적 응징보다는 5.24 조치라는 경제제재에 그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라면 ‘도발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발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핵공격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군으로서는 응징의 필연성을 핵심적 가치로 삼는 새로운 억제전략을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거부적 억제의

기본개념은

“북한이 도발하면

감내하기 어려운

손실을 강요함으로써

도발 자체를 억제한다”

는 것이었지만,

한국군이 이를

실행하지 않음

**사드 배치의 여부와
관련한 한국 국방부의
'3무(無)' 입장은
2013년 김관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비롯됨. 김 장관은
16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미 MD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미국이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함으로써
찬반논쟁의 가열화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함**

- 여기에서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은 한국으로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킬체인과 방어도 중요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억제, 다시 말해 최소비용으로 최대한의 대북 억제효과를 득하기 위해서는 응징을 중심에 두고 방어와 선제가 이를 보완하는 체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임
- 바꾸어 말해, 한국군은 응징, 방어, 그리고 선제라는 세 가지 대안들을 적절하게 혼용하는 ‘최적의 배합(optimal mix)’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와 대북·통일 정책에 막대한 폐해를 끼치는 ‘북핵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함²⁾
- 결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킬체인과 미사일방어는 불필요하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 킬체인을 위해 확보하는 각종 자산들은 방어나 응징을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으며, 그것이 군사력의 첨단화·과학화를 위해 한국군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임
- 상기의 논리에 근거하여 미사일방어를 포기해야 한다면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한국군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가지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고 말 것임
-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드의 배치 문제는 대북 억제라는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우하는 부분적 사안에 불과하며, 단 한차례 교전 기회 만들 가지는 현재의 KAMD를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사드의 배치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최소한의 조치(bottom-line)라 할 수 있음

6. 사드 배치와 한미관계

- 사드 배치의 여부와 관련한 한국 국방부의 ‘3무(無)’ 입장은 2013년 김관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비롯됨
- 2013년 10월 2일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직전에 가진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척 헤이글(Charles Timothy Hagel) 국방장관이 한국에게도 탄도미사일 방어체제가 필요하다고 한 언급이 한국 내 찬반논쟁을 촉발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곧 김관진 장관이 부인했음. 김 장관은 16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미 MD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미국이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함으로써 찬반논쟁의 가열화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함
- 이후 한국 국방부의 공식입장은 언제나 “요청받은 적도, 협의한 적도 결정된 바도 없다.”라는 것이지만 그림에도 국방부가 사드의 배치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은 여러 번에 걸쳐 나눔
- 2014년 10월 7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는 주한미군과 한국 방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이어서 2015년 3월 17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변국의 영향력 행사에 반대하며, 필요하면 우리 주도로 결정할 것”으로 발표

- 김 대변인은 2015년 5월 21일 정례브리핑에서도 “미국 정부가 사드의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한국 정부와 국방부가 내심으로는 사드의 배치를 기정사실로 간주하면서도 중국의 반발과 국내 여론을 의식하여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름

○ 의견상 미국도 한국의 입장과 궤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옴

-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등 미국의 관련 공직자들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가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¹³⁾ 이는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가 공식적 협의를 위한 타이밍을 결정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름
- 이렇듯 한미 양국이 조심스러운 행보를 지속하는 것은 그만큼 사드의 한국 배치를 관철해야 할 이유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
- 우선, 미국에게 있어 사드의 한국 배치가 안보에 사활적인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맹 관리와 세계전략의 안정성 차원에서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볼 때, 사드의 배치는 가중되는 북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동맹국에 대한 배려의 상징이며, 대북억제력의 증강이라는 관점에서 대한(對韓) 핵우산을 보완하는 효과를 가짐

○ 사드의 한국 배치가 미국의 세계전략과 아시아전략에 의미하는 바도 적지 않음

- 중국과의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NATO, 대만, 일본 등과의 활발한 미사일방어 협력을 동맹 관리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은 아시아 전략의 완전성과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
- 미국은 2012년 발표한 국방지침(DSG)을 통해 아시아 중시(Rebalancing to Asia, Pivot to Asia) 전략을 천명한 이래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¹⁴⁾
- 미국은 일본, 호주 등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인도, 몽골,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중국을 포위하는 ‘안보벨트’를 구축하며, 이 전략의 일환으로 베트남 및 뉴질랜드와의 쌍무관계를 회복하고¹⁵⁾ 필리핀 수비크만 해군기지와 및 클라크 공군기지의 미군 재주둔을 기정사실화했으며,¹⁶⁾ 2015년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재개정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함¹⁷⁾

미국에게 있어 사드의 한국 배치가 안보에 사활적인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맹 관리와 세계전략의 안정성 차원에서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볼 때, 사드의 배치는 가중되는 북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동맹국에 대한 배려의 상징이며, 대북억제력의 증강이라는 관점에서 대한(對韓) 핵우산을 보완하는 효과를 가짐

**미국이 미일동맹을
중시하고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는 중에
한국의 친중(親中)**

**행보를 굽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음

- 미국은 아시아 제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그리고 적대국으로 전쟁까지 치른 베트남과도 새로운 안보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전통적 동맹국인 한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것

○ 한국에게 있어 사드의 배치는 남북한 군사관계와 한미동맹 차원에서 사활적 안보이슈임에 틀림이 없음

- 우선, 남북 군사관계 차원에서 보면 사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술적 타당성에 한계가 있지만 종말 단계 하층방어에만 국한된 기존의 KAMD를 보강하여 중첩방어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북한의 ‘핵그림자’를 상쇄하여 남북관계 왜곡을 방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절실한 과제일 수밖에 없음

- 동맹차원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오늘날 동아시아 안보 질서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로는 중국의 경제·정치·군사적 부상과 팽창주의적 대외정책, 미국의 ‘재균형’ 전략, 미중 패권경쟁, 미일동맹 강화, 일본의 우경화·재무장 및 전후시대 마감 시도, 중러 전략적 제휴, 남중국해 긴장과 영유권 분쟁 등을 들 수 있으며, 북핵 문제와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 등이 그 뒤를 이을 것임

-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있어서 한국 변수는 고립화와 주변부화(isolation & marginalization)의 길을 걷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력 격차가 커질 수록 한국 안보의 주변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¹⁸⁾

○ 미국이 미일동맹을 중시하고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는 중에 한국의 친중(親中) 행보를 굽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음

- 2012년 미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발표한 ‘글로벌 스탠다드 2030’이 “한반도가 통일되면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라고 기술했고 2013년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한국에게 “배팅을 잘 해야 한다.”고 경고한데서 보듯,¹⁹⁾ 한국을 보는 미국의 시각은 예전과 다름

- 이는 결국 동맹의 신뢰 문제이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일 간 과거사·영토 갈등에서 한국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없으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연합작계 5027을 준수하여 대규모 증원군을 보낸다는 보장도 없음

-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유사시 지원군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과 한국 변수의 왜소화가 진행되는 현실을 직시하여, 한중관계 관리에 앞서 한미동맹의 신뢰성 강화를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고, 사드의 배치는 이를 위한 하나의 수순일 것

7. 사드 배치와 한중관계

-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무차별적이어서 외교적 결례를 무릅쓴 것이라 할 수 있음
 - 지금까지 중국은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 창완취안 국방장관,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부장조리, 쑤젠궈(孫建國) 인민해방군 부참모장 등의 입을 통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어왔고,²⁰⁾ 여기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의 경제인이나 한중 학술회의에 참가한 민간 전문가들도 가세해옴
 - 사드의 배치가 한중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한국으로서는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 높은 비중을 둘 필요가 없음
 - 세계 제3위의 핵강대국으로 부상한 상태에서 재래군사력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에 배치되는 종말 단계 방어용 요격 미사일로 인해 안보위협을 느낀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미중 간 핵전쟁 발발 시 한국이 미국의 방어가지가 된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음
 - 미중 간 핵교전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서부에 배치된 ICBM은 북극 상공으로 날게 되어있고 설령 한반도 상공으로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1,000km 이상의 고도를 날기 때문에 유효고도 150km인 사드가 중국의 핵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는 일부 중국 전문가들도 군사적 적대관계에 있지 않은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배치하는 방어미사일이 중국에게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음²¹⁾
- 사드 배치 시 동반 배치될 이동형 X-Band 레이더인 FBX-T가 중국내부의 군사동향을 탐지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억지논리가 내포
 - 사드 배치 시 동반이 유력한 레이더가 탐지거리 600km 정도의 종말 단계 요격유도용이라는 점, 한국이 보유한 이지스함들의 탐지거리도 1,000km 정도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중국이 이미 각종 군사위성들을 운영하는 우주강국에다가 한반도를 사정거리 내에 두는 DF-15 등 1,000km 미만 미사일을 1,000기 이상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합한다면, 사드가 안보위협이라는 중국인들의 주장은 지나치게 일방적임
 - 거기에다가 중국이 현재까지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방조해왔다는 사실까지 더한다면, 한국 정부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검토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
 - 부분적인 이유이겠지만,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데에는 중국인들의 뇌리 속에 잠재된 대한(對韓) 종주국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름

세계 제3위의 핵강대국으로 부상한 상태에서 재래군사력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에 배치되는 종말 단계 방어용 요격미사일로 인해 안보위협을 느낀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미중 간 핵전쟁 발발 시 한국이 미국의 방어가지가 된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음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론'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군이 지향하는

반전략/접근거부

(A2/D2) 전략도

중국의

대국굴기(大國屈起)

전략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미국의

견제력을 약화시키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야함

- 중국 지도자들은 1636년 병자호란에서 1894년 청일전쟁으로 중국이 대한반도 영향력을 상실하기 이전까지 260년 동안 한반도는 사실상 중국의 조공국이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의식이 한국을 향해 상호호혜성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요구를 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름

○ 당연히,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미중 간 지 전략적 경쟁이라는 보다 큰 구도에서 찾는 것이 옳음

-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론'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군이 지향하는 반전략/접근거부(A2/AD) 전략도 중국의 대국굴기(大國屈起) 전략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미국의 견제력을 약화시키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함

- 중국이 중국의 중요한 경제파트너이자 일본과 과거사 및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을 미일 동맹이 구축하고 있는 대중(對中) 안보벨트로부터 이탈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

- 중국은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 반대를 통해 대한(對韓) 안보외교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며, 러시아가 중국의 반대에 가세함으로써 중러 전략적 제휴를 과시하고 있는 것도²⁾ 중국의 이러한 노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

○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한중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이외에도 많음

- 우선은 한중관계가 사드라는 사안 하나로 충격을 받을 만큼 취약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정치군사적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은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공동대응하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은 2,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황해오염 방지, 황사 및 미세먼지 통제, 방사능 오염 예방 등 상생을 위해 협력해야 할 분야들이 산재해있으며, 한국은 최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고 한중 FTA에 가서명하는 등 양국 간의 경제협력도 날로 확대

○ 중국이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아직도 '현상타파' 세력보다는 '현상유지' 세력의 성격을 더 많이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서의 부상을 시도하면서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현상타파를 시도하고 있음은 알려진 일이나, 그럼에도 미국과의 군사적 상충을 초래할 만큼의 현상타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음

- 이런 추정은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질서 내에서 최대의 수혜자일 정도로 양국 간 경제적 공생관계가 강하다는 사실로도 가능하지만,

군사적 능력 면에서 여전히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유사한 추론이 가능

-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는 여전히 미국이 지배하는 해상로들을 통과해야 하고, 중국이 구축 중인 해상실크로드 또는 ‘진주목걸이’²³⁾ 우세한 미국의 해군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중국 지도부도 이런 환경에서 중대한 현상타파를 시도할 수 없음을 의식하고 있을 것이며, 이런 의식은 중국이 대외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정경(政經)분리’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나 ‘공세성’과 ‘유화성’을 번갈아 구사하고 있는 사실에도 드러남
-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심각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베트남과의 쌍무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필리핀과의 심각한 영토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필리핀의 제1교역국으로 부상
- 사드의 한국 배치는 기존의 안보질서를 재편하는 현상타파적 조치라기보다는 기존의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하나의 조치일 뿐이며, 원인제공자가 중국이 보호하는 북한이라는 점에서 중국 스스로 간접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나 한중 양국이 긴밀한 경제적 공생관계를 심화시키고 양국 모두가 쌍무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한중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은 높지 않음

8. 마치며

- 한국에게 있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어차피 병존시켜나가야 할 국가적 장기과제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연미통중(聯美通中)’ 또는 ‘연미협중(聯美協中)’을 강조하고 있음도 이런 맥락임
- 이것이 양대 과제 간에 경중(輕重)과 전후(前後)의 차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의 강화와 원칙에 입각한 안보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한국에게 있어 사드의 배치는 대북 군사안보 및 동맹관리 차원에서 사활적 사안이고, 북핵 등 점증하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이를 배경으로 하는 도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노력의 일환이라는 점과 지금까지 한국이 구축해온 KAMD 체제가 단 1회의 교전기회만을 가지는 종말 단계 하층방어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드의 배치로 인한 중첩방어 가능성이 발생시키는 군사적 가치는 적지 않음
- 동시에 한미관계에 있어 동맹관리의 중요 수단으로서 사드가 가지는 상징적 가치도 큰데, 한국에게 있어서는 사드 배치를 계기로 동맹 신뢰성을 복원하고 한국변수의 주변부화 전략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한국에게 있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어차피
병존시켜나가야 할
국가적 장기과제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연미통중(聯美通中)’
또는 ‘연미협중
(聯美協中)’을
강조하고 있음도
이런 맥락임**

사드의 배치가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한

완성이 아니라

출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며,

한국 정부와 군은

북핵이 초래하는 각종

폐해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 포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위해

각 단계에서의

대비책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점검하는

수순에 들어가야 할 것

있으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동맹국인 한국과의 미사일협력 강화를 통해 세계전략과 아시아전략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렇듯 양국 간 이해의 궤가 부합하는 상황이라면,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의 공론화와 배치 결정을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은 지금까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여 왔으나, 적어도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첫째, 한중관계 차원에서 볼 때,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며,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미중 간 지전략적 경쟁이라는 보다 큰 구도에서 비롯된 것

- 중국은 사드 반대를 통해 미국이 구축 중인 대중(對中) 안보벨트로부터 한국을 이탈시키고자 하는 안보외교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며, 북핵 대비용인 사드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중국인들의 일방적 주장에는 과장과 왜곡이 내포

- 둘째, 현재의 한중관계는 정치군사적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공생관계를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있어, 사드 배치라는 단일사안으로 인해 심각하게 충격 받을 만큼 취약하지 않음

- 셋째,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현상타파’ 보다는 ‘현상유지’를 중시하는 대외 군사정책을 견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기존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있어서 현상타파적인 조치가 되지 않으나 사활적 안보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드 문제에 함몰되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

○ 이는 사드의 배치가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한 완성이 아니라 출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며, 한국 정부와 군은 북핵이 초래하는 각종 폐해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포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위해 각 단계에서의 대비책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점검하는 수순에 들어가야 할 것

- 첫째, 정부와 군은 KAMD를 보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드의 배치가 최선인지 아니면 SM-3 미사일을 도입하여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둘째, 한국이 북한의 비대칭 위협 앞에 일방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억제제의 근본인 ‘상호취약성의 확보’를 서둘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정치적 타당성에 한계성을 가지는 방어(KAMD)와 선제(kill-chain)

에만 투자하겠다는 현 계획을 재고하고 상호취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응징’ 전략을 중심으로 삼아 선제와 방어가 이를 보완하는 방식의 억제 전략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국방재원의 재분배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며, 때문에 향후 5년간 길 체인과 KAMD에 8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은 재고되어야 함

- 셋째,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한 포괄적·종합적 대비책에는 당연히 한미 연합태세의 강화도 포함되어야 하며, 핵심은 한미동맹조약에 자동개입 조항과 핵우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미국의 안보공약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인데, 북대서양조약(NATO)의 경우와는 달리²⁴⁾ 한미 동맹조약에는 자동개입 조항이 부재하며, 핵우산도 조약 차원이 아닌 안보협의회의(SCM)의 공동성명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임
 - 현재 동맹조약 개정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들은 조성되어 있는 편임.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에 발표한 핵태세검토서(NPR)가 표현상 핵우산의 약화를 의미하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²⁵⁾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의 분리에도 대비해 나가야 하는 입장임. 2015년 4월 22일 부로 타결된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안의 내용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을 통해 한국은 계속해서 농축 및 재처리 권리를 유보함으로써 ‘평화적 핵주권’의 회복을 사실상 포기함. 당연히, 이는 한국이 미국의 반확산 정책을 존중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를 계기로 미국도 한국에 대한 핵보호 공약을 강화하는 호혜적인 조치를 취해야 마땅할 것임
- 나날이 가중되는 북핵 위협을 제대로 통제·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군과 정치권이 혼연일체(渾然一體)의 자세를 견지해야 함
- 이런 시기에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해야 할 일은 원칙에 입각한 안보정론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북핵 위협의 심각성과 대응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도록 선도하는 것이고, 정부와 군은 그러한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종합적인 대응책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예산적 뒷받침을 해야 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무임

**나날이 가중되는
북핵 위협을 제대로
통제·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군과 정치권이
혼연일체(渾然一體)의
자세를 견지해야함**

주석

- 1) 조선일보 2015년 4월 21일자 보도 참조.
- 2) 공개된 내용은 수중 사출 이후 수면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것까지이며, 미사일이 일정거리를 비행하여 목표물을 타격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음. 따라서, 시험발사이기보다는 사출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함.
- 3) 맞춤형 억제란 북한의 핵사용 과정을 위협단계, 사용임박단계, 사용단계 등으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한미 양국이 외교적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사용임박단계에서 킬체인을 이용한 선제타격을 포함시키고 있음.
- 4) 한국은 광학위성 아리랑 2호와 레이더위성 아리랑 3호 및 아리랑 3A호를 운용 중이나 선진국 군사위성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하루 2회 한반도를 통과하는 것으로 북한의 이동발사대를 추적하는 것은 무리임. 금강정찰기는 북한쪽 70~80km까지만 영상을 획득함.
- 5)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 각국의 미사일방어 실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박휘락,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대비방향: 미사일 방어망 구축,” 『군사논단』 제73호(2013년 봄호);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추진사례 분석과 한국에 대한 교훈,” 『국가전략』 제19권 4호(2013년 겨울), pp.103-106 등 참조.
- 6) 박휘락,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대비방향: 미사일 방어망 구축,” 신인균, “북한의 전방위 위협과 한국해군의 대응,” 2014년 9월 16일 해군 주최 제16차 합상토론회 발표문 등.
- 7) 푸틴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방어 무력화를 위해 건조중인 24,000톤급 핵추진전략잠수함(SSBN). 2010년까지 총 8척 건조예정이며 현재 3번함까지 건조되었음. 이 잠수함에 탑재되는 불라바는 사정거리 10,000km이며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탄도탄(ICBM)인데, 보레급 잠수함 한 척에 최대 20기까지 탑재 가능함.
- 8) 김태우, THAAD, 일단은 불가피한 선택,” 중앙일보 2015년 4월 8일자 <논쟁> “사드(THAAD)는 효과적 핵방어 무기체계인가?” 참조.
- 9) 필자는 2010년 국방신진화추진위원회를 통해 ‘능동적 억제전략(또는 적극적 억제 전략)과 3축체제 구축’을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후 다양한 발표 및 기고를 통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음. 김태우, “북한 핵미사일과 적극적 억제,” 2013년 9월 26일 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 발표문; “핵위협하 국지도발 대비 대응전략 발전방향,” 2013.3.22. 한국군사문제연구소·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해병대연구소 공동주최 세미나 발표문. “능동적 억제전략과 해군의 역할,” 2010년 11월 18일 제65주년 해군창설 기념 세미나 발표문; “북한 핵미사일과 자주적 억제수단,” 『북한』 2013년 10월호; “통일 대전략과 한국군의 역할,” 합동참모대학 학술세미나 「한반도 통일환경과 우리의 통일대비 전략」(2014.3.14) 발표문; “북핵억제를 위한 연합대비 태세 강화,” 2015년 2월 5일 여의도연구원/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 공동주최 국방정책 발전 세미나발표문; “북핵대응,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와 킬체인만으론 안 된다,” 한국경제신문 2015년 1월 30일 시론; “사드(THAAD),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미래한국』 2015년 5월호; “북한 핵위협 증대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2015 한국행정정책학회 특별세미나 “북핵 문제의 재조명과 한미원자력협력의 새지평”(2015년 5월 7일) 발표문 등 참조. 국방부 및 합참내부에서는 “능동적 억제전략하 3축체제

- 구축,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보고」 2010.12.6.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최종보고서, pp.17-21 참조.
- 10) ‘참수공격(decapitation attack)’이란 용어는 미소 냉전기간 동안 일방이 기습적 선제공격을 통해 보복공격을 명령할 상대국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했음. 그러나, 본고에서는 신인균 박사가 기술하듯 북한의 도발 책임자 개인을 응징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음. 신인균, “선제타격의 조건과 방안,” 「북한 핵개발의 성격규명과 군사적 대응의 적실성」 2014년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논문 제4장 제3절 참조.
 - 11) 이에 2010년 국방선진화추진위는 ‘능동적 억제전략’ 및 ‘한국형 3축 체제’ 건의와 함께 동원예비군 개혁, 육군 특수부대 증강, 미사일사령부 증강, 해병사단 신설, 전략잠수함 조기 건조 등을 함께 건의했음. 이 내용은 본고의 후반부에서 언급되어 있음.
 - 12) 이 방향의 주장으로 가장 종합적으로 기술한 글은 김태우·박휘락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연구책임자 정영태)」, pp.201-256 참조.
 - 13)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본국에 요청했다”(14년 6월 스캐퍼로티 USFK사령관); “사드배치 한국정부와 협의중”(14년 10월 1일 로버트 워크 국방부장관); “한미 정부 사드 배치 공식협의 없었다”(14년 10월 18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15년 1월 27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사드 배치 한미 지속적 협의중”(15년 2월 10일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커비 대변인 발언 번복(15년 2월 11일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 “사드 거론은 모든 결과에 대비하기 위한 것. 유엔협약 위배 북한 억제 위해 모든 노력다해야”(15년 5월 18일 존 케리 국무장관).
 - 14) 2012년 1월 5일 발표된 DSG는 “날렵하고(agile) 탄력적이며(flexible) 모든 종류의 상황에 대처하는 군사력”을 천명하고 있으며, “접근이 거부된 상황에서도 작전(project power despite Anti-Access/Area Denial challenges)이 가능해야 하고 지구 공유지(global commons)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15) 미국과 뉴질랜드는 2012 워싱턴 선언을 통해 “군사관계 회복 위한 정기 고위급 대화”에 합의했으며, 2013년에는 콜맨 뉴질랜드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회담으로 30년 만에 군사관계를 회복하고 협력증진, 합동훈련 등에 합의했음. 미국은 1995년 베트남과 수교했으며, 2006 럽즈펠드-팜반트라 국방장관 간의 하노이 회담을 통해 종전 31년 만에 전면 군사협력에 합의했음. 이어서 2014년 3 마틴 텀프시 합참의장의 베트남 방문, 2014년 10월 팜반민 베트남 외무장관의 워싱턴 방문, 2015년 6월 1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하노이 방문 등을 통해 40년간 지속되던 무기금수조치를 상당부분 해제하고 본격적 군사협력에 합의했음.
 - 16) 1987년 필리핀은 신헌법 채택으로 미군기지를 폐쇄했음. 1999년 방문군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으로 훈련·급유·정비 목적의 14일 체류만을 허용함. 2014년 미-필리핀 방위협력대화협정(EDCA)을 통해 방문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사실상 미군 재주둔의 길을 열었음.
 - 17) 2014년 4월 아베 총리의 방미로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은 대중(對中) 공동대응 합의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도서(島嶼) 포함 육상 공격 예방 및 격퇴에 자위대가 우선적 책임을 지고 탈환작전에 나서나, 미군이 지원 및 보완(support

- and supplement)을 수행한다”라고 명시했음. 이는 센카쿠에서 중일 간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미군이 개입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 18) 2013년 현재 중국의 GDP는 한국의 7.3배이나 현재의 성장률을 대입할 때 10년 후 1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19) 김희상, “박 대통령 방미, 한미동맹 다지는 계기 삼아야,” 조선일보, 2015년 6월 1일자.
 - 20) “사드 한국 배치는 한중관계에 영향”(14년 11월 16일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 “사드 한국 배치는 중국안보에 부정적”(15년 2월 4일 창완취안 국방장관 한국 방문시); “사드 한국 배치 반대”(15년 3월 16일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 한국언론 상대); “사드배치는 한반도 인정 저해”(15년 5월 30일 쑨젠궈 중국군 부참모장 Shangri-La Dialogue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시) 등.
 - 21) 예를 들어, 2014년 11월 21일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이 주최한 한중좌담회에서 북경대 후아한 교수는 “THAAD per se is not a threat to China’s deterrence”라고 발언함.
 - 22) 2014.7.24 러 외무부: “THAAD 한국 배치는 미국의 전 지구적 MD 확대 의미. 동북아 지역 전략적 정세에 부정적 영향, 군비경.
 - 23) 중국은 스리랑카의 함반토다, 파키스탄의 과다르,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미얀마의 스트웨/짜옥푸 등에 항구를 개발하거나 군사거점화를 시도하면서 인도양에서 유럽에 이르는 해상실크로드를 구축 중이며, 이들 지역들을 잇는 연결선이 진주목걸이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진주목걸이 전략’으로 불리고 있음.
 - 24) 제5조: “조약국은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 회원국에 대한 공격행위로 간주하며, 한 회원국이 무력공을 당했을 때에는 나머지 조약국들은 무장병력의 사용을 포함한 모든 행동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협의하여 즉각 활용함으로써 공격당한 국가를 지원한다.”
 - 25) 부시 행정부의 NPR은 동맹국에 대한 핵 및 화생공격시 미국이 핵보복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음. 오바마 행정부의 NPR은 ‘핵보복’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쌍무 동맹관계, 미군의 전진배치, 미국의 안보 공약, 미사일 방어 등을 주된 억제수단으로 강조하고 No First Use 정책을 천명했음. 당시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NPR 발표 직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은 No First Use Policy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해준 사실을 근거로 핵우산의 약화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표현상의 핵우산 약화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저자 약력

■ 김태우

現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로 뉴욕주립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함. 주요 경력으로는 세종연구소 상임객원연구위원, 국회 정책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 대통령 외교안보자문교수,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 군구조개선 소위원장, 제11대 통일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음. 전문 분야는 안보, 국방, 핵, 북한, 통일 등이며, 주요 논저로는 『북핵을 넘어 통일로』(2012) 등 8권과 역서 『핵테러리즘』(2012)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강현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윤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